고창군, 소상공인 지원 대폭 늘린다

융자지원 등 49억원 긴급 투입
시설개보수·장보기도우미
6개 전통시장 활성화도 추진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전통시장 전경.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융자지원, 지역화폐 발행, 공제 가입, 카드 수수료 지원 등 49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군은 주민들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고창사랑상품권을 올해 398억원가량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발행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상품권 환전율이 평균 90%에 이르는 만큼, 외지로 유출됐던 지역자금의 선순환 효과가 톡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3억5458만원)도 추진된다. 고창 관내 6개 시장(고창읍, 상하, 해리, 무장, 대산, 흥덕)의 시설개보수, 장보기도우미, 화재공제, 안전점검 및 방역 소독, 문화행사 등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시름이 깊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마련된다. 군은 10억 8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사업비를 편성했다.

운전자금 융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물품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노란우산공제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운전자금 융자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1년거치 2년간 상환, 이자 4% 이내로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고창군은 6월 말까지 125명에게 은행을 통해 317억26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며 2회 추경에 기금 2억과 출연금 2억을 추가로 확보, 4분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군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낙농 도우미 요청하세요
정읍시 낙농헬퍼 제도 추진

정읍시가 농장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낙농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낙농헬퍼(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낙농헬퍼 사업은 젖소 특성상 하루 2회 이상의 착유 작업으로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장 관리에 필요한 헬퍼 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낙농가 86개소를 대상으로 낙농헬퍼를 지원하고 있다.

낙농가는 설·추석 등 명절과 애경사, 교육, 여행, 여가 활용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50%만 부담하면 헬퍼 요원을 이용할 수 있다.

헬퍼 요원은 전직 낙농 목장 운영자나 목장 관리 유경험자 등 낙농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인 1조)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낙농가를 대신해 착유와 사료 급여, 축사 청소, 치료 보조 등의 목장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당 연간 12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정읍연합낙우회(063-536-0557)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에는 농가 86개소에서 604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내장산 안전수칙 준수 민관합동 캠페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 정읍경찰서, 정읍민간산악구조대 관계자들이 7일 내장산국립공원 탐방로에서 탐방객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남원시 공동주택조례 개정해 지원 확대한다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있어 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 시민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임대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등이 부족해 개선이 요구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또 분양 공동주택일지라도 지원사업에 선정됐지만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을 여러 번 나누어 추진하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기존 지원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금액까지 상향 증액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 성과 중심 일하는 조직문화로 혁신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조례 제정
간부회의도 토론 중심으로 바꿔

남원시(시장 최경식·사진)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조직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간부회의 역시 업무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가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성과 수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지급대상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연간 3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국·도비 확보 및 내부평가 우수 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는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9월 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행사와 일상업무 위주의 보고식 간부회의에서탈피해 시정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의 및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안 조정회의를 열어 나갈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던 시장 주재 간부회의를 월요일로 옮기고 시정 주요 핵심안건을 위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직의 자부심과 보람을 찾도록 하고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시민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결식아동 '행복 두 끼 프로젝트' 협약

정읍시가 지역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공헌 기관·기업 등과 손을 맞잡았다.

정읍시는 정읍시청에서 sk스토아, sk증권, 행복나래, 행복도시락협동조합, 정읍시여성의용소방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두 끼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행복 두 끼 프로젝트는 결식 우려 아동이 하루에 최소 두 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멤버사 기업, 일반시민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국내 아동의 '결식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종료 후 발굴된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멤버사 sk스토어, sk증권 등 협약체결 기관은 급식 사업비와 기부 물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사업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행복도시락 협동조합과 정읍시 여성의용소방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제조와 배달 등을 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아동 50명에게 12개월 간 총 1만3200식의 도시락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FTA 피해 보전 뱀장어 양식어가 지원

고창군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관내 뱀장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를 시행, FTA로 인한 손실 피해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뱀장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이며 한국·중국FTA 발효일 이전(2015년 12월20일)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판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액 한도는 어업인 개인당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9월8일까지 고창군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